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김 병 로 (아세아연합신학대 교수, 사회학)

◆ 논문 요약 ◆

본 논문은 분열·대립된 남한사회의 이념갈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수와 진보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남한사회의 보수와 진보는 '떠주기' '분배투명성' '대북인식'의 쟁점을 중심으로 현실론과 당위론의 지형을 형성하고 있으며, 현재의 남남갈등은 지역대립구조와 미국의 대북정책 보수화, 세대갈등의 표출, 언론의 틀짓기로 증폭되었다. 본 논문은 작금의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보수와 진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대북정책으로 '실용주의'

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실용주의 대북정책은 국민의 실생활 유익 원칙에 입각하여 남한의 대북진출이라는 공동비전을 바탕으로 국민을 통합해 나가는 남남화합 정책이다. 남남화합을 구체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갈등존재 인정, 포용정책에 대한 합의, 민주적 여론절차, 안보의식에 대한 신뢰 등 4단계 추진전략을 구사하며, 대북정책의 중심과제로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그리고 대북진출을 위한 대중, 대러 외교를 강조하였다.

I. 문제제기

최근 우리 사회는 남남갈등으로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 있다. 미군을 성토했던 촛불시위와 반핵·반김 국민대회,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장갑차 시위와 미군철수를 결사 반대하는 시청집회 등으로 나라가 온통 두 동강 나 있는 것 같다. 한편에서 미국의 부시를 비난하며 성조기를 찢으면, 다른 편에서는 북한의 김정일을 타도하자며 인공기를 불태우는 자극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갈등은 지난 8월의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극에 달하였다. 대회를 앞두고 발생한 인공기 소각과 북한의 대

회 불참선언, 정부의 유감표명, 그리고 대회도중 벌어진 보수와 진보세력 간의 충돌 등으로 이어져 큰 우려를 자아내었다. 반미와 친미, 친북과 반북의 극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대결적인 행동으로 남한사회는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 있다.

어느 사회에서나 갈등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계층간, 인종간, 세대간에 여러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남한에서도 산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계층갈등, 노사갈등, 지역갈등이 계속적으로 발생되었다. 이념갈등을 놓고 보더라도 과거에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다. 해방 직후 정권수립을 앞두고 좌우의 대립이 치열했고 70년대와 80년대에도 이념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사회주의와 경쟁적 체제로 성립된 남한은 정권수립과 함께 항상적인 이념갈등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갈등은 사회 내 다른 갈등적 요인들과 결합되어 매우 투쟁적으로 표출되곤 하였다.

그러나 햇볕정책을 두고 벌어지는 현재의 갈등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과거에는 보수정권에 대하여 진보세력이 도전하는 형태였으나, 현재의 남남갈등은 진보정부에 대해 보수세력이 공격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탈냉전과 더불어 남한에서도 문민정부가 탄생했고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었는가 하면, 진보정권이 재집권하는 상황으로 변화되었다. 기존의 집권세력과 대항세력간에 권력교체가 이루어져 공격과 비난의 형태도 달라지게 된 것이다. 게다가 분단 55년만의 남북정상회담으로 극단적으로 대립하던 남북의 이념대립이 와해되기 시작함으로써 반공을 국시로 삼고 체제의 정당성을 유지해 오던 구질서는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과 갈등은 최근 몇 년 동안 광복절 때마다 어김없이 보수와 진보단체가 대립적인 집회를 개최하고 서로를 자극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지난 정부가 햇볕정책을 앞세우며 적극적인 대북교류 정책을 추진한 이래 남한사회 내에 남남갈등의 이념논쟁은 확대되었다.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만 하더라도 남한사회가 이처럼 갈등을 빚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직항로가 순식간에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통일의 미래가 곧 다가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와 협력의 증대는 남한사회 내에 적지 않은 갈

등을 가져다주었다. 교류와 협력의 증대로 단절과 대립의 관계가 무너지는 만큼 혼란과 갈등이 커진 것이다.

이처럼 대립과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금의 남남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어떠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대립하는 두 입장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양쪽의 입장을 포용, 절충하는 균형 있는 대북정책 추진을 포기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이 모두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보다 높은 차원의 공통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공통분모를 확대하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분열되고 대립된 남한사회의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남남갈등의 지형 분석

남남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갈등의 현주소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남남갈등은 넓게 보면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사회갈등을 포함한다. 한국사회에는 계층갈등, 노사갈등, 지역갈등을 비롯하여 최근에 나타난 세대갈등까지 다양한 영역의 갈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갈등의 총체를 남남갈등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남남갈등은 대북 포용정책 혹은 햇볕정책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세력간의 갈등 양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좁혀볼 수 있다. 남남갈등이 최근에 이르러 사회내의 여러 다른 갈등과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지만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에 따라 이념갈등이 촉발되었고 대북정책이 여전히 중요한 갈등의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간의 세력다툼을 남남갈등으로 지칭하는 것은 타당하다.

대북정책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피주기’ 논란과 북한에 대한 불신에서 연유하는 ‘분배투명성’ 문제이다. 먼저, ‘피주기’와 관련하여 왜 북한은 남한에 대해 호의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도 남한은 북한에 무

조건 퍼주기만 하는가에 라는 질문이다. 보수여론의 주장에 의하면 남한은 아무런 소득 없이 북한에 끌려 다니며 퍼주기만 하고 있다. 남한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의 지원사업은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햇볕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현대아산을 금강산관광사업에 끌어 들여 현대아산을 빈사상태에 빠뜨렸고 정몽헌 회장의 자살을 자초했다. 결과적으로 ‘퍼주기’는 붕괴하는 김정일 정권의 생명만 연장시켜준 결과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적 입장에 있는 정부와 햇볕정책의 지지자들의 평가는 다르다. 보수노선의 주장과는 달리, 남한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경제적 지원은 무작정 퍼준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정부와 민간이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총 7억 달러로 이는 전세계의 대북지원 금액(26억 달러)의 28.5%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액수를 국민 1인당 연간 지원액으로 환산하여 2,500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며 결코 ‘퍼준’ 것이 아니라고 반증한다.

그런데 이처럼 ‘퍼주었다’ ‘퍼주지 않았다’라는 공방전을 펼치는 가운데서도 보수와 진보 어느 쪽도 북한을 무조건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든지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보수여론은 특히 큰 틀에서 대북지원을 반대하지 않지만, 단지 문제는 어느 속도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하느냐 하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문제삼는다. 보수 편에서는 남한이 지원한 만큼 북한이 반드시 반대급부의 행동을 보이는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신중하게 대북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진보여론은 설사 남한이 ‘퍼주기’를 했다 하더라도 퍼주는 것이 반드시 낭비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대응한다 즉 공식적으로 ‘퍼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도 ‘퍼주었다’는 것을 전제로 ‘퍼주기’가 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한다 즉 남한의 대북 지원이 북한주민들에게는 구호물자와의 접촉을 통해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에 평화분위기를 조성하여 외국투자 유치와 남한 경제의 회복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퍼주기’는 미래의 통일비용을 절약하는 평화비용이라는 것이

다. 만약 햇볕정책의 목표와 원칙, 기초를 견지하지 않았다면 북한의 도발 발생 시 불안과 위기가 고조되어 제2의 IMF와 같은 경제적 충격이 올 수도 있었음을 상기시킨다.¹⁾ 이런 맥락에서 대북지원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비용이 강경정책의 과국적 비용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들고 나온다. 따라서 현재 북한에 ‘퍼붓는’ 행동은 통일 이후 떠 안게 될 경제적 부담,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보수여론은 설령 ‘퍼주기’를 용인한다 하더라도 ‘분배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북한에 지원된 식량이나 물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특히 군사용으로 전용된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국제기구 요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민들에게 식량이나 물품을 분배하는 것은 외부인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며, 외부인사들이 떠나 가면 정부에서 다시 거두어 가기 때문에 국제기구나 NGO에서 제시하는 자료들은 분배확인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강산관광 대금과 같은 ‘현금지원’은 핵무기 개발로 전용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반대한다.²⁾

이에 대해 진보여론은 ‘현금지원 불가’에는 동의하지만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대금은 사기업활동의 영역으로 정부가 타인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한다. 또 분배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지원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물품을 전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옥수수 가루나 분유 등으로 지원하는 데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한다. 대북지원 물품이 만족스럽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엔기구의 경험적 활동에 비추어 볼 때, 분배의 투명성을 완벽하게 확보할 수는 없다는 불가피론을 제기하며 반론을 편다³⁾

-
- 1) 햇볕정책으로 서해교전 등 북측의 도전에서 불구하고 안정된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화해협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평화와 협력의 실천』(2002. 9. 2), <http://www.unikorea.go.kr>, 주요업무현황-통일정책.
 - 2) 금강산관광사업으로 현금 5억 달러가 투입되었고 추가로 3억 달러의 뒷돈까지 퍼주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금강산 사업대금은 “북한에 내는 군사현금”이라고까지 혹평하였다. 『연합뉴스』, 2001. 6. 8.
 - 3)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HR)실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일

‘퍼주기’와 ‘투명성’에 대한 이런 식의 논쟁은 끝없이 진행된다. 진보여론이나 보수여론이 아무리 구체적인 대응논리를 동원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설득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러한 남남갈등의 핵심에는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대북인식의 차이가 놓여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보수여론은 북한은 대남 적화전략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으며 북한체제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북한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하는 모든 합의와 사업들을 염려와 불신의 눈으로 바라본다.⁴⁾ 이에 반해 진보여론은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를 변호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정상회담 이후 햇볕정책의 결과로 북한이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반증하는데 노력을 집중한다⁵⁾

작금의 남남갈등의 중심에는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최근 국내 여론이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극단적인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도 결국 대북정책과 대북지원에 대한 의견차이에서 생겨났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의견들도 따지고 보면 북한을 동포로 보며 도와주어야 하느냐, 아니면 적으로 보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느냐 라는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반적으로 식량이나 구호물품을 지원하면 약 40%만이 수혜자에게 전달되며 나머지 60%는 도중에서 유출된다고 한다. UNHCR, “유엔난민집중위크샵,” 1995. 1(서울).

- 4) 정상회담에서 통일방안에 대해 ‘낮은단계 연방제’를 논의한 것은 북한의 연방제 방안 수용을 전제로 한 위협스런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국방부의 국정감사에서는 남북한이 경의선 철도 복원공사를 착공한데 대해 “경의선 지역을 적(북한)이 장악한다면 경의선 철도 및 도로는 적의 침투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하며 철도복원공사에 반대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러한 이유로 DMZ의 지뢰제거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 5)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채택으로 남북관계는 대전환을 맞게 되었고, 경의선, 동해선 도로와 철도 연결, 이산가족 상봉(5천명), 방북(4만명), 금강산관광(50만명), 신의주, 금강산, 개성 특구, 장관급회담(8차), 경추위회담(7차),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등의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남북 대결구도를 크게 완화시켰다. 통일부 통일정책실,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과 최근 북한의 변화』(2002. 10), <http://www.unikorea.go.kr>, 주요업무현황-통일정책.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념과 체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기존의 남북갈등이 우리사회 내에서 재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갈등의 주체가 남북에서 남남으로 바뀌었을 뿐 갈등의 주제는 대동소이하다는 것이다. 남북의 대립구도에서 ‘우리편’과 ‘상대편’을 가르고 선택을 강요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북한이 좋으냐” “남한이 좋으냐”라는 식으로 일방적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남갈등의 주제는 기존의 남북갈등에서 차용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⁶⁾

보수여론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축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군사공격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여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한다. 동시에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대화와 타협보다는 힘으로 굴복시켜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진보여론 쪽에서는 북한을 압박했을 경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어 남한의 경제가 타격을 받고 남북이 혼란스러워질 것을 우려하여, 북한과 화해·협력을 유지하지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대결적 상황 속에서는 남북화해를 부르짖으면 무조건 ‘빨갱이’로 매도되고, 안보를 강조하면 모두 ‘반통일세력’, ‘골수보수’로 몰린다.

보수여론은 ‘피죽기’와 ‘투명성’을 명분으로 들어 과거의 냉전질서를 고수하려 한다고 볼 수 있다. 보수주의(conservatism)의 핵심적 가치는 국가 권력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기회와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념의 기저에는 미래에 대한 대안이 없이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주의 심리가 깔려 있다.⁷⁾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보수세력도 마찬가지로 현실론에 입각하여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반대하거나 적어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진보여론은 ‘피죽기’와 ‘투명성’에 대한 대응논리를 펴가며 남북관

6) 김공열, “남남갈등의 원인, 배경, 그리고 본질: 난국 아닌 합의 가능한 갈등,” 『통일한국』 2003.10, pp. 11-13.

7) Irving L. Horowitz, *Foundations of Political Sociology*.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2, p. 106, 108. 특히 엘리트주의(elitism), 도덕적 절대주의(moral absolutism), 경건주의(Pietism)는 신보수주의(new conservatism)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이다. pp. 111-129.

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진보는 일반적으로 자유주의(liberalism)라고 부르는 이념의 다른 표현으로, 현 체제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의 이상(ideals)을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이다. 자유주의는 인간해방을 추구하는 이데올로기로 국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운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⁸⁾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optimism)를 신뢰하는 자유주의는 우리의 경우 통일한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당위론에 입각하여 분단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구사한다.

Ⅲ. 남남갈등의 원인 찾기

대북정책을 두고 벌어진 이러한 남남갈등은 보다 근원적으로 남북관계가 전환기적 상황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시기적으로 보면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은 갈등과 혼란을 맞을 수밖에 없으며, 구조적으로 보아도 남북관계가 민족문제이자 국제문제로서 이중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⁹⁾ 남남갈등은 남남사회 내의 이러한 냉전적 대의식과 탈냉전적 화해정책이 충돌하는데서 비롯되는 불가피한 현상인 것이다. 그러나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은 몇 가지 정치사회적 요인에 의해 더욱 심각하게 표출되었다.

1. 지역대립구조

남남갈등은 가장 먼저 국내의 지역대립구조와 맞물려 나타난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심각한 남남갈등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이러한 이념논쟁과 상관없이 높게 나타난다.¹⁰⁾ 햇볕정책에 대한

8) *Ibid.*, pp. 131-147.

9) 허문영,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독교인의 과제와 역할: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갈등, 그 화해의 길』(제20회 기독교문학회, 2003. 11. 8), pp. 98-111.

10) 정부의 여론조사 결과는 평균 79.8%로 대단히 높게 나타나며, 보수언론도 평균 65.5%로, 진보언론은 평균 71%로 파악한다.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 50%에 비해 매우 높은 수

국민들의 지지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정상회담 이전에 비해 이후의 대북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며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인식도 ‘매우 좋아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54.6%, ‘약간 좋아졌다’는 응답이 36.8%로 높게 나타났다.¹¹⁾ 전반적으로 남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이 6:4 정도라고 평가해 볼 수 있다.¹²⁾

그러나 이러한 대북정책과 대북지원을 바라보는 견해가 지역갈등의 정치와 맞물려 있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호남은 ‘적극 지지’가 65%인데 반해 영남은 28%에 불과하며,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성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호남은 7%인 반면 영남은 14%에 달한 데서도 지역갈등구조와 통일의식이 중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¹³⁾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남남갈등은 국내의 지역갈등 구조와 중첩되어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미국 대북정책의 보수화

남남갈등을 촉발시킨 두 번째 배경은 다분히 미국의 급작스런 정책변화

치이다. 즉 햇볕정책이 그토록 치열한 비판을 받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들은 햇볕정책 그 자체에 대해서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박선원, “남남갈등과 언론: 대북정책 보도에서 언론의 역할,” 『대북인식과 대북정책 재론: 남북화해와 남남화해를 위하여』(경남대북한대학원, 경실련통일협회, 한국NGO학회 공동 주최 학술대회, 2002. 11), pp. 11-14.

- 11)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합의문 이행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75.0%)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52.3%가 북한을 신뢰한다는 견해를 표명했으며 중고등 학생의 통일인식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29.9%가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김현옥, “남북 정상회담의 사회적 의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아태평화재단,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공동학술세미나, 2000. 10. 25), p. 98, 108, pp. 110-111.
- 12) 이교덕,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 68.
- 13) “통일 열기도 못 넘는 지역장벽,” 『시사저널』, 2000. 8. 24; 김근식, “남북 정상회담과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p. 25에서 재인용.

에 기인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관계를 전향적으로 개선시키려 했던 미국의 대북정책은 2001년 부시행정부의 등장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과 9.11사태 이후 전개되는 국제적 반테러전쟁의 분위기는 남한의 이념갈등을 촉발시켰다. 미국은 9.11테러의 연계세력으로 소위 ‘악의 축’을 언급하며 북한도 그 중의 하나로 지목하였다. 미국이 테러의 위협성이 있는 국가들에 대해 선제공격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던 터라 ‘악의 축’ 언급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공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전쟁에 대한 불안의식은 남한 내 대미의식을 미군철수와 철군반대로 극단화시키면서 남남갈등을 심화시켰다. 이런 점에서 남남갈등을 촉진시킨 배경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중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미국이 남한의 보수의를 자극한 것은 아마도 부시대통령의 자극적 언행에 더욱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대통령은 김정일정권에 대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면서 국민을 굶겨죽이는 정권”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서슴치 않았다. “북한지도자에 대해 회의감을 갖고 있다”(01.3.7), “도대체 알 수 없는 사람,” “악속을 지키지 않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01.10)이라고 하는가 하면, “대화를 수용하고 주민들에게 애정을 표현하기 전에는 김위원장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02.2.20)이라는 개인적 감정까지 드러냈다. 김정일정권에 대한 격렬한 비난이 부시대통령을 통해 공개화된 이후 남한의 보수세력은 이에 적극 동조하였다. 만약, 미국의 민주당이 권력을 장악하고 북미관계가 개선되어 미국의 대북정책이 화해협력 기조를 유지했다라면 남한 내 보수세력이 지금과 같이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감정을 당당하게 드러냈을까 의문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남남갈등의 기저에는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가 강하게 흐르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3. 세대갈등의 표출

남남갈등이 확대된 세 번째 배경은 이념적 성향이 뚜렷한 젊은층의 등장으로 세대갈등이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2002년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세대간 정치이념 성향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젊은 유권자들은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 반면 나이 든 유권자들은 이회창 후보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명확하게 갈라졌다. 노무현 후보에 대한 젊은층의 높은 지지는 진보적인 성향을 갖는 노무현 후보의 이념적 입장과 노선이 진보적 성향에 호의적인 젊은층에 어필했기 때문이며, 이회창 후보의 보수적 입장은 50대 이상 층의 정치적 선호와 유사함으로써 진보적인 젊은층에서는 외면당하게 되었다.¹⁴⁾

2002년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세대간의 차이를 보면 모두 미국이나 주한미군,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경제성장이나 복지,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부과, 재벌개혁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연령별 시각의 차이가 크지 않거나 일관된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¹⁵⁾ 그러나 미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태도에서는 세대간에 분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나이가 들수록 미국정부나 미국인, 미국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호의적인 반면, 젊은층일수록 이에 대한 호감도는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시각도 20대 젊은층에서는 ‘규모축소’가 공감을 얻는 반면, 50대 이상 층에서는 그 비율이 매우 낮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젊은층일수록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반면, 나이가 들수록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¹⁶⁾

세대간 이념적 성향을 뚜렷하게 규정지은 미국, 주한미군, 국가보안법 등은 모두 냉전시대 반공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주된 이슈였다는 점에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벌어진 남남갈등은 새롭게 등장한 세대갈등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미군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았고 그것이 2002년 월드컵 기간 중에 터져나옴으로써 ‘진보적인’ 젊은 세대가 정치적으로 동원되는데 성공하였다. 진보적 젊은 세대의 등장으로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대립이 심화된 것이다

14) 강원택, “2002년 대선을 통해 나타난 세대간 불신” 『한국사회의 불신구조와 해소방안』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31차 심포지엄, 2003. 6. 2, 한국프레스센터), p. 5.

15) 강원택, “위의 글,” p. 6.

16) 강원택, “위의 글,” p. 7.

4. 언론의 틀짓기

마지막으로 남남갈등이 증폭된 데는 언론의 역할이 컸다. 우리사회에서 일고 있는 남남갈등은 언론에 의해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나타났던 것이 사실이다. 보수의견과 진보여론을 대변하는 각각의 언론들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 비판 또는 옹호의 틀짓기를 시도하면서 대립구도를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은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논조가 이러한 틀짓기의 대표적인 선두주자라고 이해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남북의 경제협력보다는 군사안보문제를 더 비중 있게 다루며 햇볕정책을 반대하는 전문가를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는가 하면 사실에서도 주로 햇볕정책을 반대하는 논조를 취하였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남북의 경제협력을 비중 있게 다루고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전문가를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며 햇볕정책에 우호적인 사실을 게재하였다.¹⁷⁾

또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보수언론은 한겨레, 경향신문, 대한매일, 한국일보 등 진보언론과 비교해 볼 때, 햇볕정책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러한 적대성은 더욱 극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¹⁸⁾ 2000년 3월 베를린 선언 이전까지는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여론조사에서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그다지 차이가 크지 않다. 1998년 3월부터 1999년까지는 보수언론사의 여론조사결과가 진보언론사의 조사보다 지지율이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¹⁹⁾ 그러나 2000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의 김정일 위원장 관련 발언과 3월 베를린 선언 이후 보수언론과 야당은 본격적으로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다. 2000년 6월 정상회담 이후 10월부터 보수언론은 남북관계가 지나치게 빠르다

17) 박흥원, “언론과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내용분석,”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Summit: Two Years of Developments and Future Prospects*(경남대학교, 조지타운대학교, 한국언론재단 공동주최 국제회의, 2002. 5), pp. 13-21.

18) 박선원, “남남갈등과 언론: 대북정책 보도에서 언론의 역할,” 『대북인식과 대북정책 재론: 남북화해와 남남화해를 위하여』(경남대북한대학원, 경실련통일협회, 한국NGO학회 공동 주최 학술대회, 2002. 11).

19) 박선원, “위의 글,” pp. 9-10.

는 속도조절론을 펼치며 햇볕정책을 공격하였고, 진보언론은 김대중대통령을 옹호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

IV. 남남화합을 위한 공통분모 찾기: 실용주의 대북정책

1. 실용주의 대북정책의 원칙

이처럼 대립되고 분열된 대북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과연 우리는 남남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하는가? 지난 몇 년간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법으로 ‘햇볕정책’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며 진보여론을 주도하였다. 북한에 김정일이 정권을 잡고 있는 한 변화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보수세력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햇볕정책으로 북한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조목조목 예를 들어가며 반박하였다. 북한에 ‘퍼주기’를 그만하라는 반대측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북한에 결코 퍼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연간 지원액은 국민 1인당 몇 천 원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결국 정부는 보수세력의 주장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사고인가를 폭로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것이다.

그러나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반박하는 방식으로는 작금의 남남갈등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보혁(保革)간의 의견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꾸준한 대화는 필요하겠지만 상대방의 신념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인 것이다.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설득하려는 시도로는 보수와 진보를 결코 화해시킬 수 없다. 이제는 보수와 진보의 상대주장을 논리적으로 공격하는 식의 비난전술로부터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남남갈등의 수렁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대북시각과 대북정책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히 요청된다.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이 모두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보다 높은 차원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공통분모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남남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북정책의 접근방법과는 패러다임이 다른 실용주의 대북정책 혹은 실리주의 대북접근을 펼쳐야 한다. 지

금까지는 주로 대북정책을 당위론적으로 접근하였다 국민합의에 근거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핑크빛 대북정책의 목표와 내용을 제시해 놓고 이를 ‘민족’과 ‘동포’라는 담론에 근거하여 당연히 따라해야 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당위론적 접근방법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실리적이며 실용주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당위론적 설득의 방식은 한계가 있으며 대다수 국민들의 참여를 동원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용주의(pragmatism)란 원래 “지식은 실제 생활에 유용하다고 검증될 때에만 참”이라는 명제에 기초한다. 실용주의는 실제성과 현실 유용성에 입각하여 구성원들의 일상 생활을 중시한다. 따라서 실용주의 대북정책이란 대북교류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국민들의 실생활에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집행해 나가는 정책을 의미한다 민족구성원으로서 혹은 동포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당위성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각자가 자기 생활에 얼마나 유익하다고 느끼는가를 기준으로 성패를 평가하는 대북정책인 것이다. 보수의 현실주의와 진보의 이상주의를 타협하여 공통분모를 찾는 길을 “무엇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유익한가”라는 실용주의 대안밖에 없는 것 같다.

실용주의 대북정책은 먼저, 남북 분단체제의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모순과 문제점을 인식시킴으로써 국민들 스스로 이러한 모순적 구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자발적 동기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분단모순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대륙진출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며 대륙진출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통일비전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지역을 통과해야 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킨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륙진출이 남한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가를 강조함으로써 자발적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인식과는 상관없이, 즉 북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든 부정적으로 평가하든 상관없이, 남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경제사회의 공간을 대륙으로 연결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 실용주의 대북정책을 위한 비전공유

남남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비전의 공유는 분단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보수세력이건 진보세력이건 분단구조에서 남한이 처해있는 상황이 21세기 국가발전에 매우 불리하다는 점에는 동의할 것이다. 남한은 분단으로 인해 지리적으로 고립된 섬과 같이 밀폐되어 있다 삼면이 바다요, 남은 한 면마저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지리적으로 이처럼 폐쇄된 나라는 지구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의식과 가치관은 지정학적 요인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토록 밀폐된 공간에 놓여 대륙진출의 꿈을 상실한 상태이다. 자동차를 타고 평양을 지나, 중국으로, 모스크바, 유럽으로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자유를 꿈속에서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좁고 답답한 삶의 공간이 대륙으로 확장되면 우리의 생활권이 아시아와 유럽대륙으로 연결되어 경제, 사회, 문화생활에 큰 유익을 가져다준다.²⁰⁾

지리적인 밀폐성은 우리의 경제와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분단갈등 구조에서 남한경제는 북한의 '위협'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취약한 실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남북한의 분단갈등 구조는 상대방 사회의 모든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단구조 하에서 남한의 경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남한의 경제가 꾸준히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북한이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감행한다면 남한의 경제는 일시에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 북한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적인 문제와는 상관없이 북한과 협력하지 않고서는 장기적으로 남한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없다. 북한과의 경제협력과 대북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경제권을 대륙으로 연결하여 분단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남한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남한의 생존전략이다. 대륙진출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은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대중국 및 대유럽 물류비, 수송비 절감효과를 가져

20) 이런 맥락에서 2003년 6월 14일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반세기 동안 끊겼던 남북의 철도 도로가 연결된 것은 이러한 열린 공간의 꿈이 실현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온다. 이는 북한에도 이익²¹⁾을 가져다주어 남북 모두 윈윈게임을 할 수 있다.

또한 지리적 공간의 열림은 오랜 남북대립으로 형성된 적대적이며 배타적인 사회관계를 해소하고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져다준다. 남북분단으로 증폭된 남북간 불신은 우리 사회 내부의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고갈시켰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인 신뢰(trust)가 21세기의 국가발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주장한다.²²⁾ 남북한은 불신과 대결의 오랜 지속으로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상실했다. 우리 사회는 IMF의 파국을 맞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도 파산상태에 이르렀다. 불신은 분단이 빚어낸 최대의 비극이며, 분단의 극복, 즉 통일은 최소한의 안정과 신뢰를 갖춘 우리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과정이다.

탈냉전 10년이 지난 지금 경제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세계화가 가속되고, 정보화, 국제화라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변화와 혁명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분단의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폐단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21세기 남한이 국제경쟁력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 남한의 대북정책은 일차적으로 북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남한의 살길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보수이건 진보이건 간에 분단의 폐해를 극복하고 무한경쟁의 국제화 시대에 살아 남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대륙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목표에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공통된 목표에 동의한다면

21) 김일성도 사망직전인 94년 6월 벨기에노동당 중앙위원장과 의 담화에서 중국 쪽의 서해안철도를 중국상품 수송루트로 활용하면 연간 4억달러를 벌 수 있고, 동해안철도를 통해 러시아나 중국 동북3성의 물자를 운송해 줄 경우 연간 10억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등 가만히 앉아서 한해에 15억 달러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며 실리를 계산하였다. 김일성, “벨지끄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 『김일성저작집 4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471.

22) 신뢰가 없는 사회는 불신으로 인해 공직자의 부패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정부부패를 감시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모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Francis Fukuyama, 구승희 옮김, 『트러스트』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7), pp. 449-450, 457. 현대사회의 신뢰에 관한 연구는 Barbara A. Misztal, *Trust in Modern Societies* (Cambridge: Polity Press, 1998) 참조.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비전을 이룰 것인가는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V. 실용주의 대북정책의 추진전략과 과제

1. 실용주의 대북정책 추진 전략

1) 갈등존재의 인정

남한사회 내에서 ‘퍼주기’ ‘분배투명성’ ‘북한인식’ 등에 관한 의견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국내의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보수여론의 주장은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는 듯 보인다.²³⁾ 우리 국민들은 “남한의 경제도 어려운데 대북지원과 투자가 말이 되느냐”는 비판의 여론이 적지 않으며, 국민들의 58.3%가 현재 남북관계의 진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²⁴⁾ 지난 58년간 남북간에 쌓여 있는 불신이나 우리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주의 시각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주의 입장을 민족주의 혹은 당위론적 주장을 가지고 배타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입각해 볼 때, 실용주의 대북정책은 대북정책에 관해 시각차이와 의견차이가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세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서로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고 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의견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상대방의 의견과 가치관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공통의 목표를 위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갈등은 투쟁과 분열을 야기하여 사회를 파괴하기도 하

23) 김수환 추기경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부정적 발언은 이러한 보수여론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김추기경은 “북한은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자세와 체제에 아무 변화가 없고, 오히려 이를 계기로 남한에 친북·반북의 분열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03. 8. 27.

24) 『동아일보』, 2000. 10. 9; 2000. 10. 20.

지만 때로는 궁극적인 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갈등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은 해방공간과 비교하면 그리 파괴적인 것은 아니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좌우갈등 혹은 보혁갈등으로 표현되는 현금의 남남갈등은 해방직후 남한사회 내에서 나타난 대립 반목과는 양상이 다르다. 해방 전후기에 이념적으로 대립된 상황과 비교하면 그다지 치명적이지 않다. 해방공간에서의 이념대립은 좌익과 우익이 각자 원하는 이념과 체제를 가진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반목하고 대립하며 적대시했던 전면전과 같은 것이었다면 현재의 갈등은 북한에 대한 접근방법에 대한 차이가 충돌한 국지전과 같은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국지전을 상업 언론이 전면전으로 부풀림으로써 대립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²⁵⁾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현상에 대해서 무조건 소모적인 것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민주 사회의 다양성을 나타내주는 증표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²⁶⁾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대북정책이 총선이나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정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정당정치의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다. 과거처럼 지역주의라는 일차적 유대관계에 입각하여 자신의 정치적 선호를 결정하는데서 벗어나 특정정책을 기준으로 유권자들이 자신의 선호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한국의 정당정치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북정책을 두고 많은 논란을 벌이고 갈등하는 상황은 특정정책을 중심으로 정치참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정치현상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25) 김공열, “남남갈등의 원인, 배경, 그리고 본질: 난국이던 합의 가능한 갈등,” 『통일한국』 2003. 10, p. 11.

26) 최용섭, “한국의 정당과 사회 제집단의 북한·통일관: 남남갈등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20권(2001년), pp. 65-85.

2)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합의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다음 단계의 방법은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김대중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아니라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대한민국의 정책이라는 점을 서로 합의하는 것이다. 대북정책에 대한 특별한 명칭은 없었지만 1970년대부터 북한과 남북대화를 시작하였고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진지하게 추진하였다. 1980년 5공화국에서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제안하였고, 노태우정부에서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그리고 김영삼정부에서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정리되어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로 이어져 내려왔다. 대북 포용정책은 특히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으로 탄력을 받은 일관된 정책으로 민족공동번영의 여지를 넓혀가기 위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현 정부는 대북정책을 ‘평화번영정책’으로 설정하고 그 요체를 “주변국가와 협력하여 당면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의 실질협력 증진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현하고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지원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나아가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하여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²⁷⁾ 평화번영정책의 목표와 내용은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것들이다. 진보세력이건 보수세력이건 화해협력 혹은 포용이라는 큰 틀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지엽적인 의견은 다르다 하더라도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는 대북 포용정책은 정권을 막론하고 변함없이 추진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추진될 것이라는 데 합의해야 한다. 대북 포용정책은 차기정권을 어느 당이 장악하느냐에 상관없이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는 대북정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현재의 남남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다.

27) 통일부, 「평화번영정책 해설자료」, <http://www.unikorea.go.kr>, 업무현황 “통일정책” 부분.

3) 민주적 여론수렴 절차에 대한 동의

대북사업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실용주의 관점에서 국민들의 여론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용주의 대북정책은 당위론적인 접근방식으로부터 현실주의를 포용하는 균형을 갖춘 대북정책을 말한다. 당위성에 근거하여 미래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서부터 눈높이를 낮추어 우리 사회가 서 있는 현실을 토대로 동원가능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가시적 효과를 가져오는 실제적인 대북정책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남남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적인 대북정책은 국민여론에 기초해야 한다. 철저히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대북정책을 집행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 모두 전체 국민들의 의사가 무엇인지 신속하게 알 수 있는 전달체계가 마련되고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직면하는 남남갈등을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지 않으면 통일과정에서 현재보다 더 큰 혼란을 맞게 된다. 남한의 진보와 보수가 유념해야 할 것은 통일과정에서 이념적 지평은 지금보다도 훨씬 커진다는 점이다. 북한정권이 붕괴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지역에 제도적으로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정당결성을 통해 재집권을 시도할 것이며, 이는 남북간의 정치적 갈등과 극도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동유럽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구사회주의 정당들을 대부분 민족주의 정당으로 탈바꿈하여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한총련의 이념적 성향을 흡수하기 어려운 남한의 이념적 토양에서, 그리고 남한내 각 정당들의 민주적 연합과 연대의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확대된다면 사회통합 시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이와 같은 통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현재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 여론수렴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남한내 각 정당들의 민주적 연합과 연대의 훈련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확대된다면 북한지역에서 제도적으로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정당결성을 통해 재집권이 실현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보수와 진보가 우리 사회 내에서부터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 훈련과 공동체적 공존문화를 창출·정착시키도록 노력해야 한

다. 우리사회 내부에서 민주적 절차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노력이 없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평화변영정책의 실현은 머나먼 이상에 불과할 것이다.

4) 안보의식에 대한 신뢰

남한국민들의 안보관에 대한 문제점은 안보의식 해이가 아니라 상호간의 불신에 있다. 국민들은 대부분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의 안보의식이 투철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나, 실제 자기 자신은 어느 누구보다 안보의식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철저한 안보관을 갖고 있으나 다른 사람들은 안보의식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다. 남한국민들의 안보관은 안보의식이 해이한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불신하는데 있다.

실용주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안보관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강조되어야 한다. 북한이 전시대응체제를 구축해 왔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 최소 생계를 유지하며 체제를 방어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전쟁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고도의 정보력을 갖춘 한미연합 방위태세는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정권도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거나 전쟁대비에 무기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한 안보관을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인정하고 더 이상 이 문제로 상대방을 헐뜯지 말아야 한다.

안보관과 관련하여 북한이 변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중요하다. 북한이 변하고 있느냐에 대한 대답은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보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변하지 않았는가를 냉철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북한지도부'의 태도를 문제삼는 것이고, 변했다는 주장은 '주민들의 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고집스런 태도가 변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우리는 동유럽의 공산정권이 끝까지 항전하다 궤멸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북한의 정권도 스스로 변하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정권의 정체성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북한 지도부의 태도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식은 분명히 달라졌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2. 실용주의 대북정책의 중심 과제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당위론적 관점에서 실용주의 관점으로 접근법이 바뀌면, 그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북사안에 집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대북정책을 추진하려면 대북정책의 중심고리를 설정하고 그 축을 중심으로 하여 전반적인 정책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진보와 보수의 여론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현 시기의 대북사안은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문제, 그리고 대륙진출을 위한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협상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대중·대러 외교에 대해 실용주의 접근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1)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진보와 보수,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로 대립하고 있는 남남갈등을 만족시키는 대북정책은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문제이다. 경제협력은 최근 한국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노사갈등이 심각해지면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남한의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남한의 중소기업인들은 어려워진 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북한'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내기업들이 한동안 동남아나 중국으로 진출했는데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남아나 중국보다 노동력과 비용 면에서 유리한 북한으로 진출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한다. 개성공단에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참여하며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남북간 경제협력은 산업간 보완발전이라는 각도에서 보다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남한이 북한에 무조건적으로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구조 상 보완적 교류를 통해 공동이익을 창출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신발, 의류 등 남한의 사

향산업을 북한에 이전시키고 자동차, 전자산업의 시장을 북한지역에 확장하여 남북한이 공동으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지는 것이다. 단기적 손실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궁극적으로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 따라서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막대하게 출혈되고 있는 현재의 군비를 경제투자로 전환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 경제적 편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남한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남한의 경제형편이 어려운데 북한에 투자할 여유가 없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남한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특히 북한의 경제가 침체된 주요한 원인은 분단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치열한 군비경쟁으로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는 군사비를 줄여 경제건설에 대한 투자로 전환한다면 남북경제협력 재정을 마련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님을 강조해야 한다.

남북한이 국방비지출을 축소하면 투자를 증가시키게 되어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며 병력규모의 축소는 노동력의 증가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생산요소 투입의 증대를 통한 생산증가 효과를 가져온다. 남북한이 4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할 경우, 즉 남한이 인구비례로 가정하여 27만 명의 병력을 유지할 경우, 국방비지출과 보유병력의 축소만을 통해 연간 평균 4-5조원 정도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²⁸⁾ 남북한 총군사비 연간 230억 달러 가운데 남한만 보더라도 40억 달러 이상의 재원을 절감하여 경제건설에 전환할 수 있다. 200만의 병력을 30-40만으로 축소할 경우 서울과 신의주 고속도로를 연간 5개 건설할 수 있다는 추계도 있다.²⁹⁾ 근대화 초기인 60년-70년대에는 군대가 교육, 직업훈련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근대화에 기여하였으나, 현재 남북한의 군대는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어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축소가 필요하다. 군축과 경제투자로의 전환은 남북한의

28) 조동호,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통일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7. 6. 5), p. 99.

29) 『연합뉴스』, 2000. 5. 24.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유력한 대안이기 때문이다.³⁰⁾

한편, 이산가족 상봉사업은 실용주의 대북정책이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영역이다. 이산가족에 대한 문제는 보수여론에서 가장 중시하는 대북사안이다. 우리사회의 보수여론을 주도하는 세력인 ‘이북5도민회’는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보수여론을 흡수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산가족은 햇볕정책의 입장에서 보아도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부분이다.³¹⁾ 이산가족은 북한 내에서 차별받는 집단으로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북한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용주의 대북정책의 과제로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퍼주기’를 하는 것도 실효성 있는 전략이다.

민족통일을 국시로 내걸고 58년 동안 체제를 유지해 온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의 초보적인 이산가족들의 방문이나 만남조차 이루어낼 수 없다면 거대한 통일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 그토록 오랜 세월동안 사무치도록 그리운 부모형제를 만나지 못하게 버려두었다는 사실은 어떤 이념과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범법자들에게도 가족들의 면회를 허용하는 것이 인권을 생각하는 현대사회이다. 남한정부는 남북으로 흩어진 모든 가족들, 월남자, 월북자, 탈북자, 납북자, 국군포로 등의 이산가족에 대해 생사여부 확인작업을 실시하는데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이산가족들의 만남과 상호방문을 위해 대대적인 재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산가족문제를 폭넓게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30) 사실 국방비 지출과 병력규모의 축소로 발생하는 편익은 통일이 가져올 유형, 무형의 편익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러한 군비축소와 병력감축이 물가, 성장률, 국제수지, 이자율 등 남한과 북한의 경제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군비 및 병력감축이 가져올 효과는 대단히 클 것이다. 통일된 남북한의 인구(노동력)는 세계 12위, 경제 20위가 되며, 군사비(병력 세계5위, 군사비 13위)를 경제력에 활용할 경우 세계 8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

31) 김병로,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in Korea,” *Korea and World Affairs*, Vol. 21, No. 2(Summer 1997), pp. 183~198.

2) 대륙진출을 위한 대중국, 대러시아 외교

현 정부가 꿈꾸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의 미래는 이러한 지리적 공간의 개방을 통해 실현될 것이 확실하다. 근래에 침체되고 있는 국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리적 폐쇄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이어지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원산과 청진을 통해 연해주로 나가는 동해안 고속도로를 착공해야 한다. 이 사업을 현실화하려면 북한, 중국, 러시아와 통행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대륙진출을 위한 북한과의 협상과 대북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 연해주로 진출하기 위한 외교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이르쿠츠크 가스사업의 경우에는 북한과의 협력이 불투명하여 북한을 우회하여 서해 해저터널을 통과하기로 합의되었다. 이러한 사업방식은 남한의 대륙진출을 위한 좋은 사례이기는 하지만, 북한지역을 통과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가급적이면 북한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관계망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대륙진출의 SOC가 구축되고 외교 관계망이 형성되면 일본의 해저터널 사업도 촉진하여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로 성장하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다.

주변국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치열하게 갈등하는 미국과의 관계설정에도 도움이 된다. 친미와 반미 사이에서 의견대립이 치열한 상황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자연스럽게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대북문제 해결방식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주변국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갈등은 친미와 반미로 극단화되는데, 친중, 친러, 친일 등의 의견이 많아지면 친미와 반미의 대립을 자연스럽게 약화될 것이다. 이러한 갈등의 스펙트럼이 커질수록 이 갈등을 민주적 방식으로 조정하면 균형을 유지하여 역동성 있는 사회로 발전할 것이다.

VI. 맺음말

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선전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남한 내부의 입장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등한히 해왔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고 21세기 통일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북포용정책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원치 않을 때는 한번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상현실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방법은 개선되어야 한다.

동시에 남북한의 체제가 통일로 가는 길에 보혁의 정치갈등은 평화통일의 과정에서 언젠가는 겪어야 할 진통으로 받아들이는 의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지난 58년간 지속되어 온 남북대결구조가 해체되는데 따르는 남한내부의 갈등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남북관계는 58년 동안 대결과 갈등을 반복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전쟁을 치르고 아직 화해를 하지 못한 남북한이 단번에 이성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남북한 관계가 아직 정상화되지 못하고 북한의 반응이 비정상적인 만큼 남한사회 내부에서 북한에 대한 기대와 태도를 두고 표출되는 갈등과 대립을 포용적 자세로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하다.

남남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비전의 공유는 분단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남한내부의 의견차이는 대륙진출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대륙진출을 위해서는 북한과 협력해야 한다. 북한의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현 시기에 북한과 협력한다는 것은 북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탈냉전의 세계화시대에 남한의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북한을 ‘민족’으로 보든, ‘적’으로 보든 상관없이 대륙으로 진출하는 열린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원치 않는다면 굳이 강행할 필요는 없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은 일차적으

로 북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남한의 생존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독일통일이 가능했던 것도 베를린이라는 서독의 땅이 동독의 한 가운데 위치했었기 때문이었음을 주시해야 한다.³²⁾ 동서독의 이러한 상황을 남북한에 대입해 본다면 평양의 한복판에 남한 땅이 있는 격이니 통일의 지리적, 공간적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돌아보게 된다. 북한 땅에 지리적 개방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북한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분명한 것은 지난 10년간 나진·선봉과 금강산, 신의주, 개성 등의 지역이 개방되었으며, 개방 공간에 노출된 사람들은 변화의 자극을 받고 있다. 북한의 정권은 스스로 변하지 않을 것이고 변할 이유도 없겠지만,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은 공간의 열림과 더불어 확실히 변해가고 있다. 통일은 지리적 공간의 열림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한의 대륙진출을 위한 생존전략으로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좁은 공간에 갇힌 이 땅의 젊은이들은 나라를 떠나고 싶은 마음에 이민상품을 구입하고 원정출산도 마다하지 않는 실정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대륙진출의 꿈과 희망을 주는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모두 진정한 자유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남남갈등을 뛰어 넘어 대륙으로 통하는 확 트인 세상, 열린 세계를 만드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듯이 만주와 시베리아 별관을 넘나들며 세계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하루 속히 보고 싶다.

32) 김병로,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사회과학』 제32권 1호(1993년), pp. 123-148.

참고 문헌

- 강원택. “2002년 대선을 통해 나타난 세대간 불신” 『한국사회의 불신구조와 해소 방안』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31차 심포지엄, 2003. 6. 2, 한국프레스센터), pp. 3-21.
- _____. “세대, 이념과 노무현 현상,” 『계간 사상』(2002년 가을호), pp. 80-102.
- 김근식. “대북지원과 남남갈등: 퍼주기 논란과 정당성 주장을 중심으로”(2002) http://www.kifs.org/main/dbbank/db_view.php?s_id=581.
- 김공열. “남남갈등의 원인, 배경, 그리고 본질: 난국 아닌 합의 가능한 갈등,” 『통일한국』 (2003. 10), pp. 11-13.
- 김병국 외. 『한국의 보수주의』. 서울: 인간사랑, 1999.
- 김병로. “비전 있는 생존전략이 우선이다,” 『통일한국』 (2003. 10), pp. 20-22.
- 김석근 외.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서울: 인간사랑, 1999.
- 김 욱. “한국사회 갈등구조의 다변화: 의미와 대처방안,”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한국정치학회 학술대회, 1994), pp. 91-106.
- 김현욱. “남북 정상회담의 사회적 의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아태평화재단,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공동학술세미나, 2000. 10. 25).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한국사회의 불신구조와 해소방안』(31차 심포지엄, 2003. 6. 2)
- 박선원. “남남갈등과 언론: 대북정책 보도에서 언론의 역할”(2002) http://www.kifs.org/main/dbbank/db_view.php?s_id=1243
- 박홍원. “남남갈등 보도의 정치적 의미,” 『저널리즘비평』, 32권(2001), pp. 62-66.
- 박효종. “보혁간의 ‘순리적인 비합의의 정치’를 위하여,” 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306/200306230239.html.
- 백종국. “한국 내 보혁갈등의 성격과 해소 방안에 대하여: 참여정부의 등장을 중심으로,” 『갈등, 그 화해의 길』(제20회 기독교학문학회, 2003. 11. 8), pp. 20-31.
- 서재진. “평화변영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2003년), pp. 33-63.
- 신동아. “‘보수’는 반격을 노린다,” 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200009/nd2000090010.htm(2000년)
- 유영욱. “남남이념갈등 극복을 위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27권(2003년), pp.

99-129.

이교덕.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0).

이도영. “한국에 ‘이념’이 어디 있나 선·악의 대결뿐이지,”(2003년)
kforum.co.kr/bbs/view.php?id=all&no=115.

이우영. “남남갈등과 화해,” 『민족화해』(2003년 11/12월호, 제5호), pp. 19-21.

이철승. “(안보)색깔론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2003년)
www.newsjoa.com/news_view.html.

정용석. 『햇볕정책: 기대와 좌절』(서울: 자유사, 1999).

제성호. “국가보안법과 남남갈등,” 『중앙법학』 4권 3호(2003), pp. 69-112.

조동호.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통일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7.6.5).

조 민. “노무현 정부의 평화변영정책: 전망 및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2003년), pp. 1-32.

최용섭. “한국의 정당과 사회 제집단의 북한 통일관: 남남갈등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0권(2001), pp. 65-85.

통일부. 『평화와 협력의 실천』(2002.9.2),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과 최근 북한의 변화』(2002.10), <http://www.unikorea.go.kr>, 주요업무현황, “통일정책.”

_____. 『평화변영정책 해설자료』, <http://www.unikorea.go.kr>, 주요업무현황, “통일정책.”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편. 『남남갈등과 반미정서』.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2.

허만호. “이념갈등과 통일정책 관계: ‘민중통일론’의 제도적 수용성,”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한국정치학회 학술대회, 1994), pp. 931-962.

허문영. 『대북정책 및 통일문제 관련 국내여론 현황 및 통합방안』(서울: 통일연구원, 2001).

Horowitz, Irving L. *Foundations of Political Sociology*.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2